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의견조사 결과 요약집

조사주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공동참여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ICBS),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설문개요

새롭게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혁신방안은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R&D 관리·지원 법규 제·개정 등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설문주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공동참여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ICBS),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 설문진행: BRIC SciON
- 조사대상: 과학기술 종사자
- 조사기간: 2018년 3월 19일 ~ 3월 23일 (5일간)
- 소요시간: 약 7분 (30문항)
- 문의: member@ibric.org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요약

1.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1-①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혁파

- ✓ 과제 공모 기회를 확대·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 조기 공개
- ✓ 창의적 경쟁과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유사과제 원천 배제 원칙 개선
- ✓ 연구 방법까지 제한하는 획일적인 RFP 공고 개편



1-②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 ✓ 기술·시장 환경 변화로 연구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발적 연구중단 허용
- ✓ 연차평가는 폐지, 최종평가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다변화



1-③ [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 ✓ 사전 통제 -> 사후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 관리 행정 개편
- ✓ 1년 단위 획일적인 협약 폐지, 연초·연말 집중된 과제 평가 분산
- ✓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 분리로 연구자에게 집중된 책임과 부담 분산



1-④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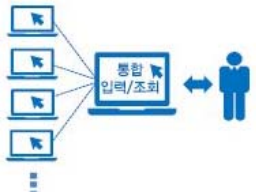
- ✓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연구자 손해 배상 청구 금지
- ✓ 연구 현장의 선의의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2-①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 ✓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 통합
- ✓ 연구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 17개 부처별 → 2개 시스템)



2-②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 ✓ 20개로 나누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단일 서비스 제공



2-③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

- ✓ 정부 제도와 별도로 임의 운용되는 전문기관 자체 지침·관행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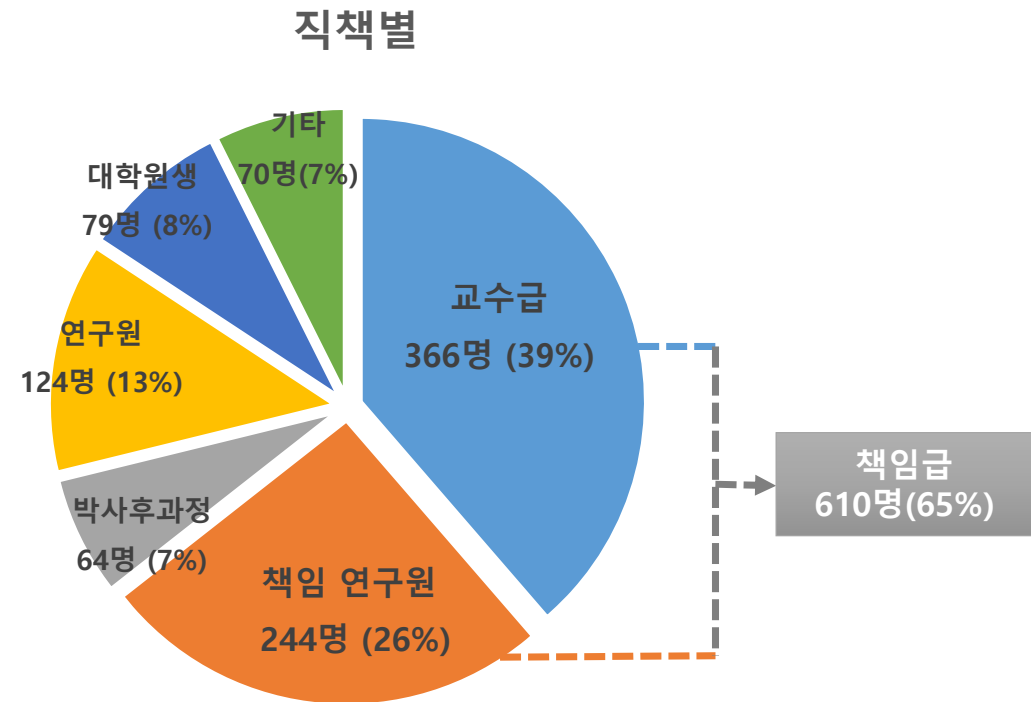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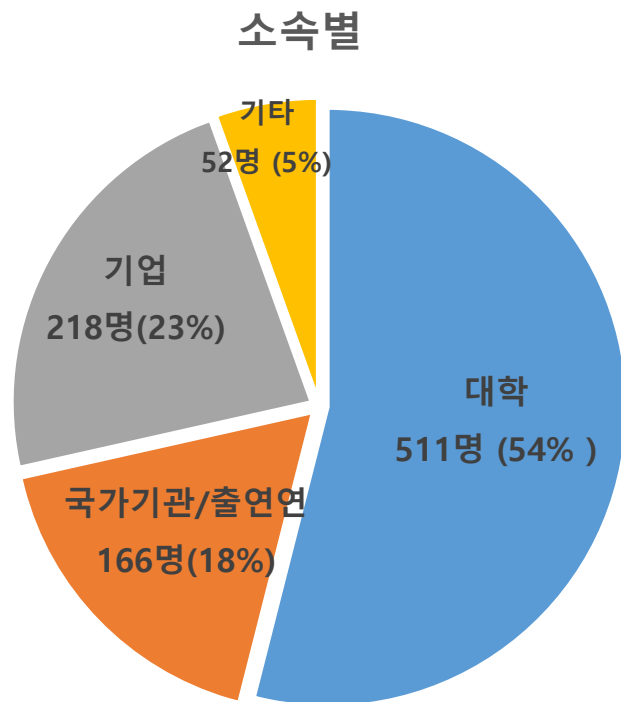


2-④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 ✓ 부처별 R&D 관련 법규를 동시에 개정하고 연구현장 소통 체계화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상세보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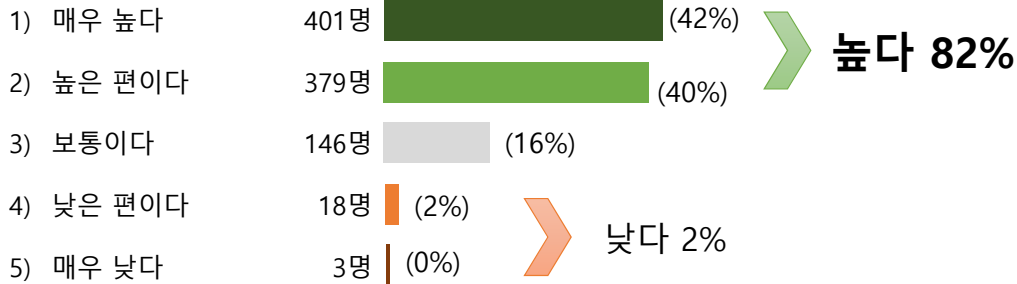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 분석 : 총 947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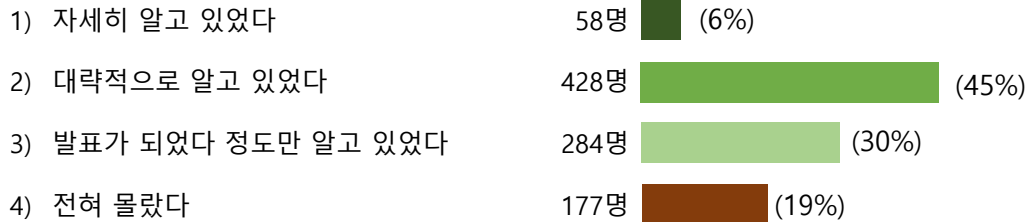
설문 결과 분석

▼ 과학기술 정책 인지

Q1 평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Q2 최근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마련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교차분석 ▼

Q1

	1)	2)	3)	4)	5)	전체
전체	401 42%	379 40%	146 15%	18 2%	3 0%	947 100%
소속별						
대학	209 41%	211 41%	79 15%	10 2%	2 0%	511 54%
국가기관/출연연	75 45%	68 41%	21 13%	2 1%	0 0%	166 18%
기업	90 41%	84 39%	38 17%	6 3%	0 0%	218 23%
기타	27 52%	16 31%	8 15%	0 0%	1 2%	52 5%
직책별						
교수급	177 48%	150 41%	35 10%	3 1%	1 0%	366 39%
책임급 연구원	110 45%	107 44%	26 11%	1 0%	0 0%	244 26%
PostDoc.(박사후과정)	22 34%	25 39%	15 23%	1 2%	1 2%	64 7%
연구원	45 36%	45 36%	28 23%	6 5%	0 0%	124 13%
대학원생	21 27%	30 38%	23 29%	5 6%	0 0%	79 8%
기타	26 37%	22 31%	19 27%	2 3%	1 1%	70 7%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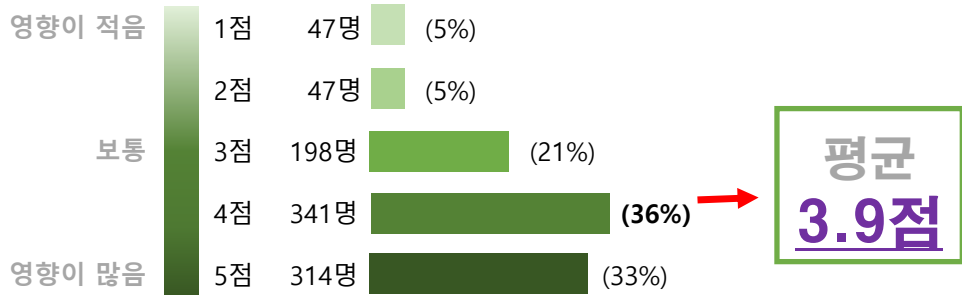
Q2

	1)	2)	3)	4)	전체
전체	58 6%	428 45%	284 30%	177 19%	947 100%
소속별					
대학	25 5%	246 48%	153 30%	87 17%	511 54%
국가기관/출연연	14 8%	82 49%	43 26%	27 16%	166 18%
기업	15 7%	79 36%	76 35%	48 22%	218 23%
기타	4 8%	21 40%	12 23%	15 29%	52 5%
직책별					
교수급	20 5%	189 52%	109 30%	48 13%	366 39%
책임급 연구원	17 7%	118 48%	72 30%	37 15%	244 26%
PostDoc.(박사후과정)	3 5%	26 41%	24 38%	11 17%	64 7%
연구원	9 7%	41 33%	39 31%	35 28%	124 13%
대학원생	3 4%	28 35%	21 27%	27 34%	79 8%
기타	6 9%	26 37%	19 27%	19 27%	7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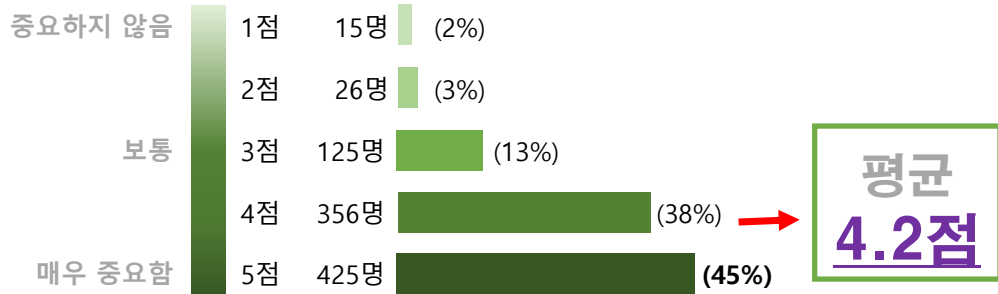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1. R&D 프로세스 규제 혁파 : 1-①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혁파

Q3 1-①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혁파 개선안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Q4 1-①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혁파 개선안이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Q5 1-①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혁파 에 대해서 문 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202명 주관식 응답

유사과제 원천배제 원칙만을 내세워, 실제 같은 키워드라고 해도 접근방법이나, 해결방법이 다르면 충분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성이라는 말로 제외 시킴. 같은 키워드라고 해도 가치와 방향을 보고 그 가능성을 판별해줄 분야별 전문 평가 위원선별이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한 RFP를 제외하고는 과제의 응모기간, 심사 및 결정시간, 예산 배정등을 매년 같은 일정에 진행 함으로서 연구자들이 과제응모 를 충분한 시간과 준비된 일정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과거를 무시한 획일적인 개선안은 또 실패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는 과제 선정 경쟁율을 통계숫자로 낮게 보이게 하려는 꿈 수에 불과하다. 자기가더 하고 싶은 연구과제에 응모하여 선정되면 중복되는 하던 연구는 중단하거나 조기 종결할 수가 있어야한다. 왜 이런 규제(과제참여 기회 제한하는 규제)가 생긴 것인지를 파악하여 문제의 핵심이 아닌 포폴리즘이나 정치적인 이유 였다면 과감히 개선해야한다.

응답 전체 보기 : <http://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rnd11.html>

교차분석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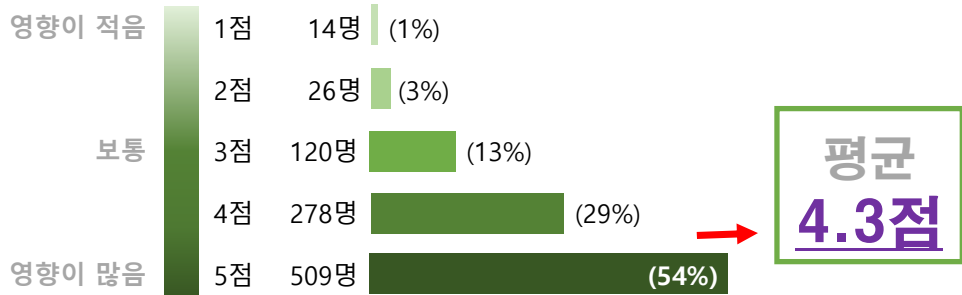
전체	평균
전체	3.874
소속별	
대학	3.916
국가기관/출연연	3.928
기업	3.711
기타	3.981
직책별	
교수급	4.003
책임급 연구원	3.963
PostDoc.(박사후과정)	3.906
연구원	3.718
대학원생	3.595
기타	3.457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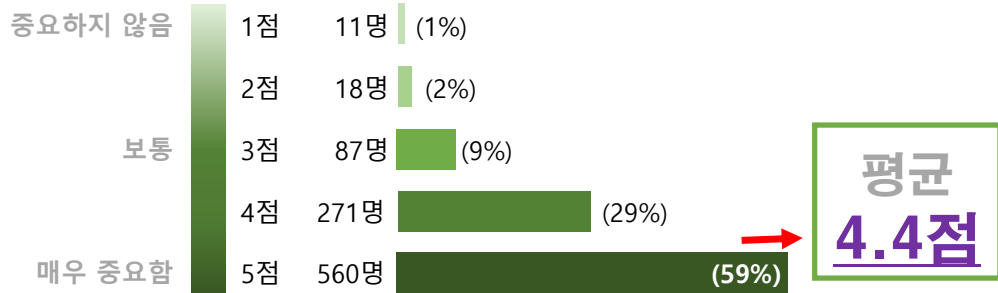
전체	평균
전체	4.214
소속별	
대학	4.231
국가기관/출연연	4.247
기업	4.165
기타	4.154
직책별	
교수급	4.227
책임급 연구원	4.283
PostDoc.(박사후과정)	4.359
연구원	4.153
대학원생	4.025
기타	4.100

1. R&D 프로세스 규제 혁파 : 1-②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Q6 1-②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개선안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Q7 1-②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개선안이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Q8 1-②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200명 주관식 응답

최근 R&D 상황을 보면 연구개발 시작하기전에 결과를 내 놓는경우와 같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해봐야 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게 R&D 라고 생각합니다. 첫 계획서부터 연구비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이라던가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통해 추후 해당 기술에 문제가 생겨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때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R&D는 말 그대로 개발입니다. 어딘가 있는 기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년 과제에서 1년 마다 과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연차마다 연차보고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 피해를 보는 연구자가 있음.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를 강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기초연구과제와 산업화과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산업화과제의 경우 특허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성과판정을 과제 종료 후에 하는게 바람직함.

응답 전체 보기 : <http://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rnd12.html>

교차분석

Q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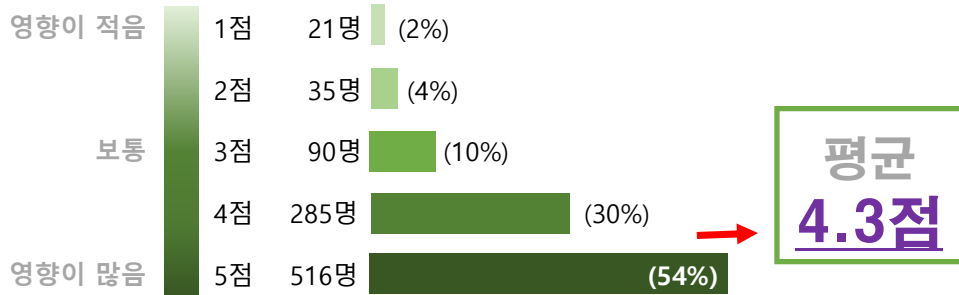
		평균
전	체	4.312
소 속 별		
	대학	4.440
	국가기관/출연연	4.422
	기업	3.940
	기타	4.250
직 책 별		
	교수급	4.486
	책임급 연구원	4.307
	PostDoc.(박사후과정)	4.422
	연구원	4.194
	대학원생	4.228
	기타	3.614

Q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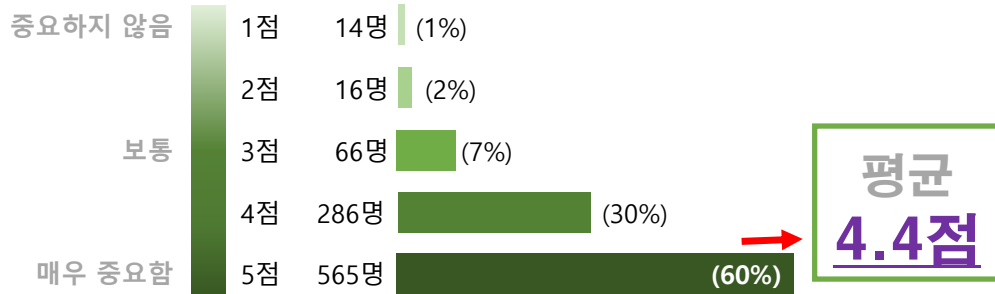
		평균
전	체	4.427
소 속 별		
	대학	4.497
	국가기관/출연연	4.542
	기업	4.202
	기타	4.308
직 책 별		
	교수급	4.527
	책임급 연구원	4.430
	PostDoc.(박사후과정)	4.438
	연구원	4.411
	대학원생	4.316
	기타	4.029

1. R&D 프로세스 규제 혁파 : 1-③ [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Q9 1-③ [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개선안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Q10 1-③ [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개선안이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Q11 1-③ [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162명 주관식 응답

행정 직원이 충당되는 것은 좋으나, 해당 인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꼭 필요함. 행정 직원 인건비는 학교/연구소 자체 비용 충당이 필요할듯.

다년도 협약의 피해자는 연구책임자보다 현장의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더 큼. 어차피 강하게 심사해서 떨어뜨리는 것도 아닌 계속과제의 연차협약을 매년 해야해서 그때마다 협약이 늦어지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어 월급 지급이 늦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자체 규정 때문에 영수증처리와 같은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관 및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

응답 전체 보기 : <http://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rnd1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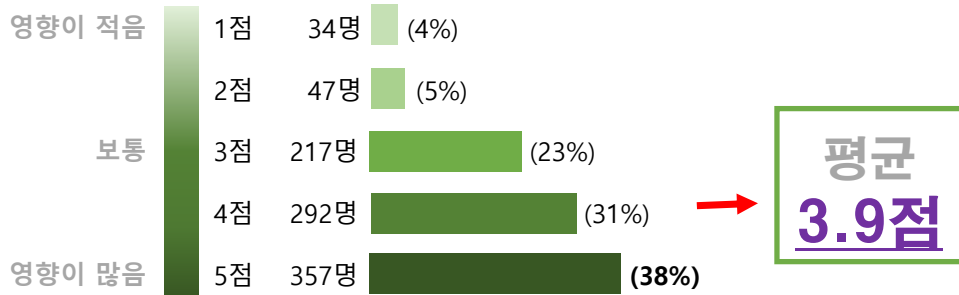
교차분석

Q9		평균
전체		4.309
소속별		
대학		4.427
국가기관/출연연		4.373
기업		4.028
기타		4.135
직책별		
교수급		4.486
책임급 연구원		4.295
PostDoc.(박사후과정)		4.406
연구원		4.185
대학원생		4.253
기타		3.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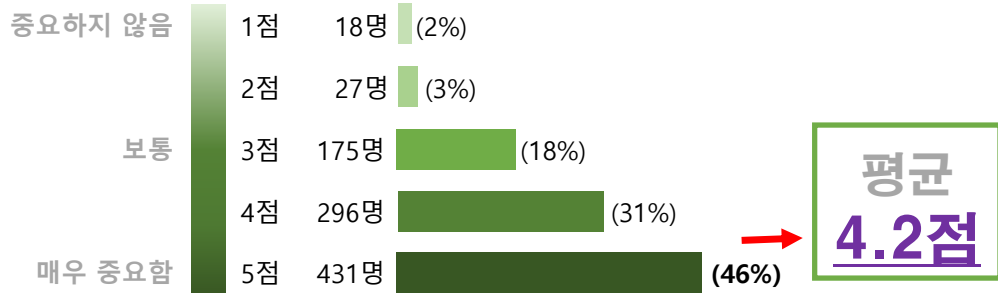
Q10		평균
전체		4.449
소속별		
대학		4.511
국가기관/출연연		4.500
기업		4.275
기타		4.404
직책별		
교수급		4.530
책임급 연구원		4.439
PostDoc.(박사후과정)		4.531
연구원		4.419
대학원생		4.329
기타		4.171

1. R&D 프로세스 규제 혁파 : 1-④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Q12 1-④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안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Q13 1-④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안이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Q14 1-④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86명 주관식 응답

연구관련자가 아닌 연구책임자에게 연구 수행에 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을 수 있고 또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이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즉 연구책임자는 전반적인 연구수행 및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물론 윤리적인 면도 포함됨

연구비위행위를 적발하는 것조차 피해자 입증주의를 따르는 이상한 현행 법으로 발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필요하나 이를 청구 금지 등으로 고정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실패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이를 관련자 및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은 그 근본적 이치를 따져볼 때 매우 마땅한 행위임

개선안에 더불어 연구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액스일 경우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보험제도 도입 필요

응답 전체 보기 : <http://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rnd14.html>

교차분석

Q12

		평균
전	제	3.941
소 속 별		
	대학	3.924
	국가기관/출연연	4.078
	기업	3.904
	기타	3.827
직 책 별		
	교수급	3.954
	책임급 연구원	4.033
	PostDoc.(박사후과정)	3.984
	연구원	3.984
	대학원생	3.747
	기타	3.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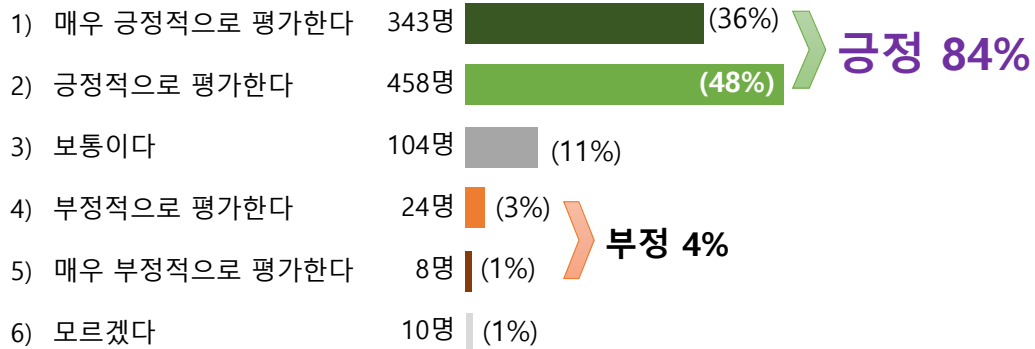
Q13

		평균
전	제	4.156
소 속 별		
	대학	4.129
	국가기관/출연연	4.259
	기업	4.142
	기타	4.154
직 책 별		
	교수급	4.128
	책임급 연구원	4.225
	PostDoc.(박사후과정)	4.203
	연구원	4.129
	대학원생	4.127
	기타	4.100

▼ 1. R&D 프로세스 규제 혁파

Q15

R&D 프로세스 규제 개선으로 제시된 4가지(①기획·공모, ②연구수행·평가, ③연구관리, ④제재) 안에 대해서 귀하의 종합적인 평가는?



모름을 제외한 5점 척도 ▼

소속별	대학	국가기관/출연연	기업	기타
5점척도 평균	4.226	4.220	4.037	4.176

직책별	교수급	책임급 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5점척도 평균	4.311	4.243	4.141	3.950	3.961	3.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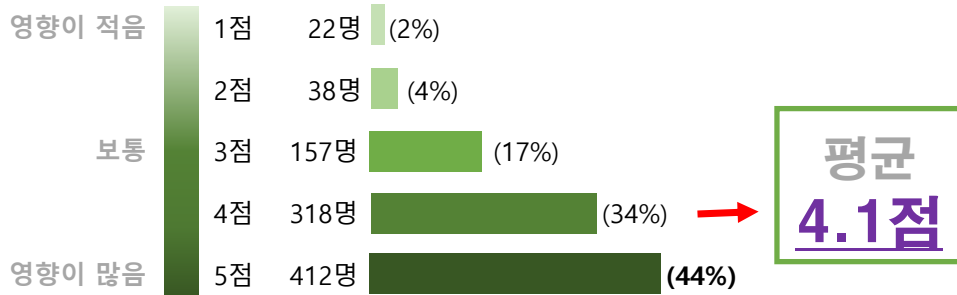
교차분석 ▼

	1)		2)		3)		4)		5)		6)		전체	
전체	343	36%	458	48%	104	11%	24	3%	8	1%	10	1%	947	100%
소속별														
대학	192	38%	252	49%	47	9%	11	2%	3	1%	6	1%	511	54%
국가기관/출연연	59	36%	85	51%	17	10%	3	2%	0	0%	2	1%	166	18%
기업	71	33%	99	45%	34	16%	10	5%	3	1%	1	0%	218	23%
기타	21	40%	22	42%	6	12%	0	0%	2	4%	1	2%	52	5%
직책별														
교수급	162	44%	167	46%	24	7%	5	1%	5	1%	3	1%	366	39%
책임급 연구원	96	39%	117	48%	24	10%	5	2%	1	0%	1	0%	244	26%
PostDoc.(박사후과)	20	31%	34	53%	9	14%	1	2%	0	0%	0	0%	64	7%
연구원	28	23%	64	52%	25	20%	3	2%	1	1%	3	2%	124	13%
대학원생	18	23%	44	56%	9	11%	6	8%	0	0%	2	3%	79	8%
기타	19	27%	32	46%	13	19%	4	6%	1	1%	1	1%	7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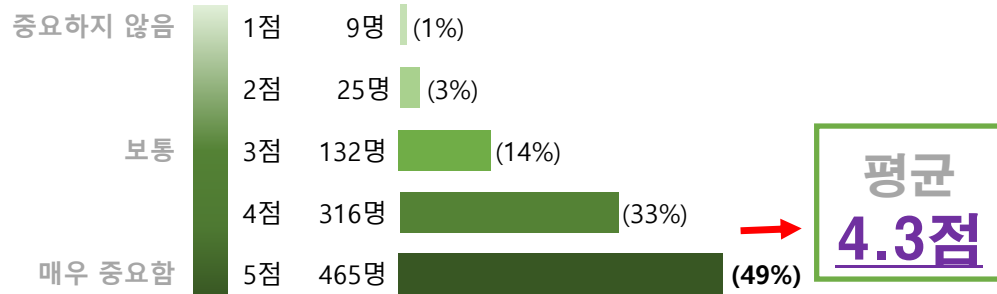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 2-①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Q16 2-①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개선안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Q17 2-①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개선안이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Q18 2-①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109명 주관식 응답

수주한 연구과제의 시작과 종점이 다르며, 기관별로 과제 종료 몇개월전까지 재료비를 소진해야 하는 기간들이 다르므로, 몇가지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음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큰 항목으로 제안을 해서 연구비를따면 연구자가 쉽게 알아서 항목이든 뭐든 바꾸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돈을 집행할수 있게 해야함

17개로 분산된 부처를 2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폐쇄되는 부처들이 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에 행정 업무를 떠넘기는 일은 더더욱 없기를..

연구비 사용 및 관리 기준 마련도 중요한 사항이나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홈페이지 또는 연구비 집행, 정산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었으면 합니다. 연구발주기관, 과제관리기관의 담당자들도 상황에 따라 기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조직이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응답 전체 보기 : <http://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rnd21.html>

교차분석 ▼

Q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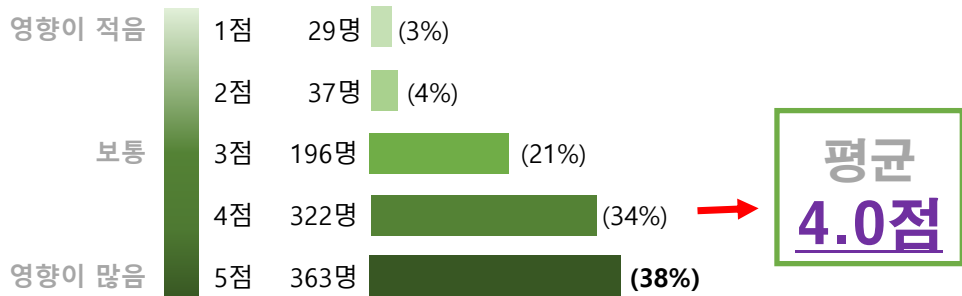
		평균
전	체	4.119
소 속 별		
	대학	4.243
	국가기관/출연연	4.120
	기업	3.885
	기타	3.885
직 책 별		
	교수급	4.306
	책임급 연구원	4.057
	PostDoc.(박사후과정)	4.156
	연구원	4.105
	대학원생	3.886
	기타	3.614

Q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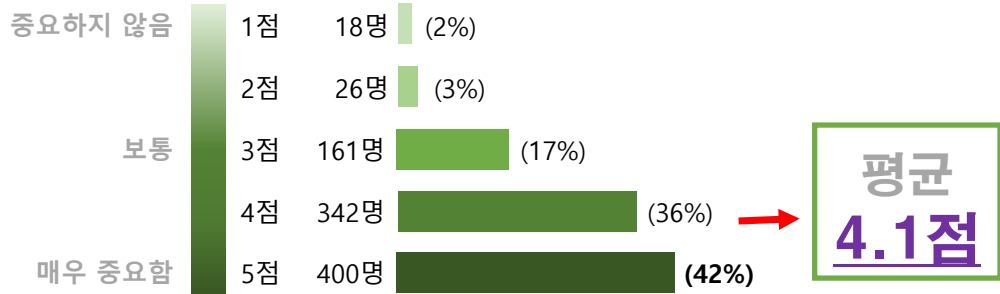
		평균
전	체	4.270
소 속 별		
	대학	4.305
	국가기관/출연연	4.307
	기업	4.197
	기타	4.115
직 책 별		
	교수급	4.336
	책임급 연구원	4.279
	PostDoc.(박사후과정)	4.234
	연구원	4.274
	대학원생	4.165
	기타	4.043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 2-②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Q19 2-②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개선안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Q20 2-②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개선안이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Q21 2-②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51명 주관식 응답

과제신청은 연구재단, 연구비관리는 이지바로 및 해당기관 시스템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음. 과제 정산 시 해당기관과 이지바로에서 과제정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전산상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연구과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추진 가능하다면 매우 혁신적인 것이라 판단됨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로그인 절차와 개인 정보 요구는 시스템 통합에 저해 요소로 작용

연구결과 공개라고 하더라도 특허, 논문 발표가 진행 되는 등 아직 연구 성과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결과를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부적합한 연구결과의 사용이나 연구비밀 유지를 위하여 과도한 경우가 없어야 함. 꼭 공개되어야 할 또는 공개되어도 문제가 없는 내용에 대한 관련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는 시스템 필요.

응답 전체 보기 : <http://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rnd2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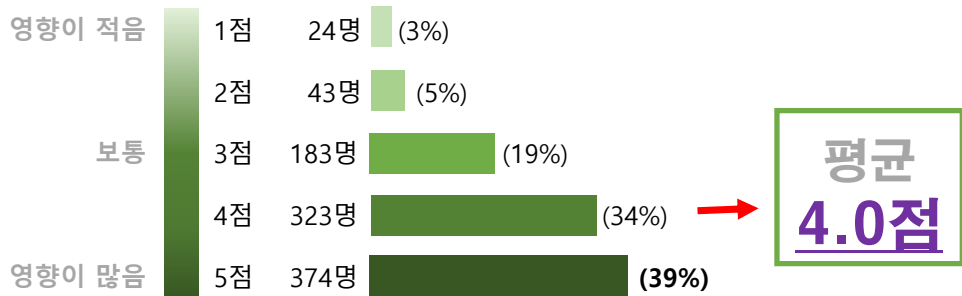
교차분석

Q19		평균
전제	소속별	4.006
	대학	4.094
	국가기관/출연연	4.060
	기업	3.794
	기타	3.865
직책별	교수급	4.128
	책임급 연구원	4.025
	PostDoc.(박사후과정)	4.000
	연구원	3.952
	대학원생	3.886
	기타	3.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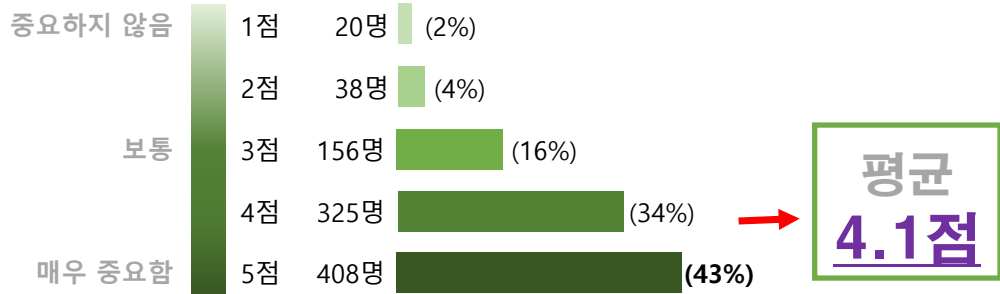
Q20		평균
전제	소속별	4.140
	대학	4.182
	국가기관/출연연	4.157
	기업	4.032
	기타	4.135
직책별	교수급	4.197
	책임급 연구원	4.143
	PostDoc.(박사후과정)	4.141
	연구원	4.105
	대학원생	4.038
	기타	4.014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 2-③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

Q22 2-③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 개선안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Q23 2-③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 개선안이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Q24 2-③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60명 주관식 응답

기관마다 예산을 짤때 요구하는 세부사항들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음. 비목이나 배정된 금액분율등..통일이 필요함

전문 기관의 행정서비스가 실제로는 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같은 경우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면 전혀 의미 바뀐 담당자에게 이전 행정 처리의 결과 여부를 매번 설명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업무를 영역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업무 담당자와 세부 업무 담당자를 구분하여 연구자가 직접 contact 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걸 출력해서 19세기 방식으로 도장받기를 원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연구지원이 아닌 연구 방해 시스템.

연구행정 서비스의 통일성은 정말 중요하다. 서로 다른 지침운영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행정업무를 발생시키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통일하고 제대로 안내서를 만들어 안내를 해주었으면 한다.

응답 전체 보기 : <http://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rnd23.html>

교차분석

Q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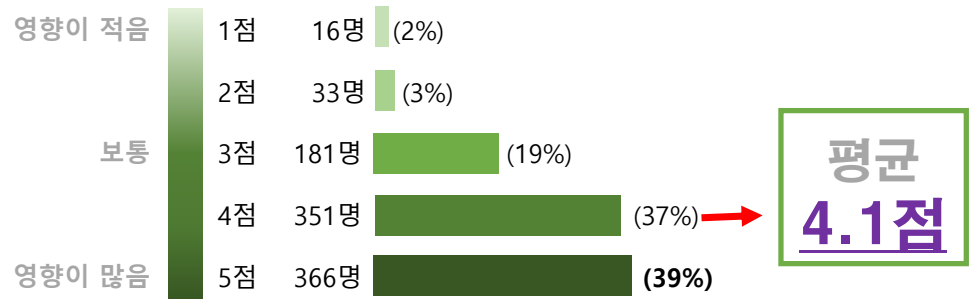
		평균
전	체	4.035
소 속 별		
	대학	4.088
	국가기관/출연연	4.133
	기업	3.876
	기타	3.865
직 책 별		
	교수급	4.158
	책임급 연구원	4.061
	PostDoc.(박사후과정)	4.063
	연구원	4.024
	대학원생	3.709
	기타	3.657

Q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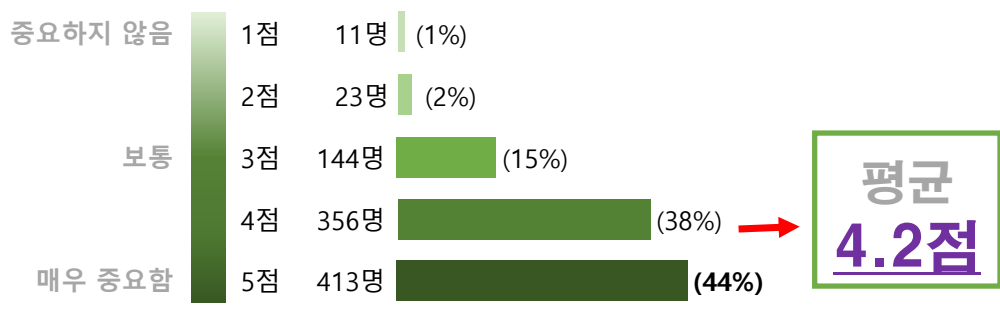
		평균
전	체	4.122
소 속 별		
	대학	4.147
	국가기관/출연연	4.175
	기업	4.050
	기타	4.019
직 책 별		
	교수급	4.205
	책임급 연구원	4.168
	PostDoc.(박사후과정)	4.125
	연구원	4.081
	대학원생	3.861
	기타	3.900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 2-④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Q25 2-④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개선안은 본인의 연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까?



Q26 2-④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개선안이 과학기술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십니까?



Q27 2-④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에 대해서 문제점, 부족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

51명 주관식 응답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과학기술계가 물갈이 되는 현상이 매우 심하게 느껴집니다. 정치계와 과학계의 유착이 심하여 과제비 수주와 제도 변화에도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이루어 지는 개혁이 향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 되어있었으면 합니다.

부처간 산재되어 있는 기초연구과제의 통합 운영 원칙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합운영으로 특정분야에 과도한 연구비가 집중되어 대중이 관심은 적지만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지속적 역할을 한 분야의 기초연구 기반이 붕괴되지않도록 효율적인 예산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운영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담당인력을 더 많이 증원해야한다고 생각함. 예전에 비해 통합콜센터 운영 등으로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편해졌지만 여전히 고압적인 공무원 특유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음. 관리자(간사)는 매니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담당 연구과제가 너무 많고 단독으로 정보를 관리해서가 아닐까 생각함. 팀단위의 과제 관리가 되었으면 함.

응답 전체 보기 : <http://www.ibric.org/community/biohelp/reply/rnd24.html>

교차분석

Q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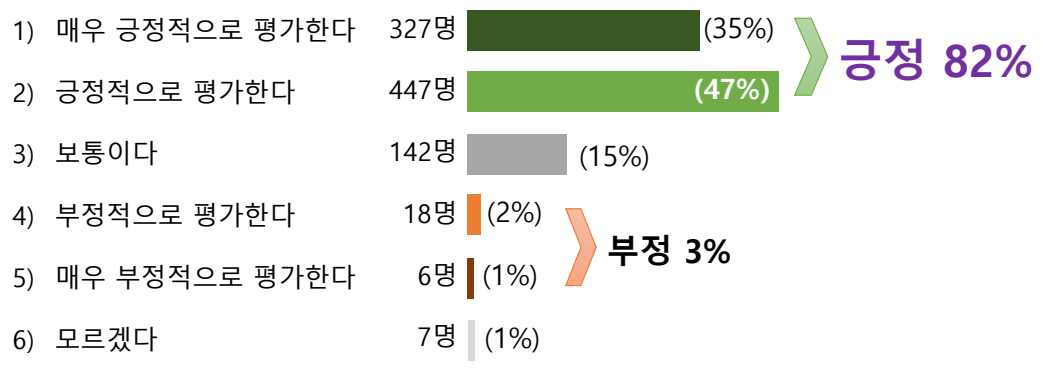
		평균
전	제	4.075
소 속 별		
	대학	4.114
	국가기관/출연연	4.241
	기업	3.894
	기타	3.923
직 책 별		
	교수급	4.158
	책임급 연구원	4.102
	PostDoc.(박사후과정)	4.063
	연구원	4.048
	대학원생	3.899
	기타	3.800

Q26

		평균
전	제	4.201
소 속 별		
	대학	4.196
	국가기관/출연연	4.313
	기업	4.142
	기타	4.135
직 책 별		
	교수급	4.210
	책임급 연구원	4.258
	PostDoc.(박사후과정)	4.297
	연구원	4.145
	대학원생	4.025
	기타	4.157

▼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Q28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으로 제시된 4가지(①연구비, ②연구정보, ③전문기관, ④제도) 안 대해서 귀하의 종합적인 평가는?



모름을 제외한 5점 척도

소속별	대학	국가기관/출연연	기업	기타
5점척도 평균	4.173	4.230	3.995	4.118

직책별	교수급	책임급 연구원	PostDoc. (박사후과정)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5점척도 평균	4.277	4.193	4.063	3.959	3.833	3.956

교차분석 ▼

	1)	2)	3)	4)	5)	6)	전체
전체	327 35%	447 47%	142 15%	18 2%	6 1%	7 1%	947 100%
소속별							
대학	183 36%	240 47%	75 15%	10 2%	0 0%	3 1%	511 54%
국가기관/출연연	69 42%	70 42%	23 14%	1 1%	2 1%	1 1%	166 18%
기업	57 26%	113 52%	37 17%	6 3%	3 1%	2 1%	218 23%
기타	18 35%	24 46%	7 13%	1 2%	1 2%	1 2%	52 5%
직책별							
교수급	155 42%	164 45%	37 10%	7 2%	1 0%	2 1%	366 39%
책임급 연구원	88 36%	120 49%	33 14%	1 0%	2 1%	0 0%	244 26%
PostDoc.(박사후과	18 28%	33 52%	12 19%	1 2%	0 0%	0 0%	64 7%
연구원	32 26%	58 47%	27 22%	5 4%	0 0%	2 2%	124 13%
대학원생	15 19%	39 49%	21 27%	2 3%	1 1%	1 1%	79 8%
기타	19 27%	33 47%	12 17%	2 3%	2 3%	2 3%	70 7%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설문결과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961>